

공 개



의안번호	제 27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7. 22. (제 14 차)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7. 22.

## 1. 의결주문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신용협동조합법」상 위반사항인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과 관련하여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및 제84조 등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별표 3> V-2.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0.5.14.) 심의필

<별지>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 □□□ □□□ : '개선(改選)'으로 조치 요구

#### 조치 대상자 명세

직 위	성 명	귀 책사항
□□□	□□□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 2. 조치사유

###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 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5.3.30.~2018.7.2. 기간 중 ○○○ 등 8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04건, 170억 1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96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31.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5억원)를 최고 22억 19백만원(총자산의 3.9%)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84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2)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생활 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9.11.27, 2018.7.24. △△△△△ 등 2명의 직원에게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2건, 5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4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12.1.26.~2017.2.3.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 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13건(3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4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 관계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제84조의2(퇴직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을 포함한다)는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6. 법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표준규정 등)** ①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수신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2016.10.24. 개정전)** 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한다.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 30억원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 50억원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2016.10.24. 개정후)** 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⑦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26조(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2.]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 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를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를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유 형 \ 위법 · 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직무 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문책 경고(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V-2. 신용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출취급 등

1. 제재대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2.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자기자본대비 기준		총자산대비 기준	
	차주별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개선(改選)/면직	50% 초과	100% 초과	25%초과 또는 7억원초과	5%초과 또는 21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30%~50%	50%~100%	1.5%~2.5% 또는 5억원~7억원	2.5%~5% 또는 11억원~21억원
문책경고/감봉	20%~30%	30%~50%	1%~1.5% 또는 3억원~5억원	1.5%~2.5% 또는 9억원~11억원
주의적경고/견책	10%~20%	20%~30%	0.5%~1% 또는 1억원~3억원	1%~1.5% 또는 3억원~9억원

- 주 1)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기자본대비 초과비율로, 총 자산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자산대비 초과비율(금액)로 양정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 3) 각 정해진 범위는 '초과'부터 '까지'임.
- 4) 총자산대비 기준으로 양정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제재종류가 총자산비율대비기준 과 금액대비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더 무거운 제재로 함.
- 5)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주의 등 조치

3. 가중 및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3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제 2010.8.31>
- 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임직원대출 등)** ①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비상근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은 가능함

3.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고객과 동일한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 가. 예금,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 나. 공제대출
  - 다. 예탁금대월 : 제4호의 범위내
  - 라.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4. 다음 각 목의 소액 대출금
  - 가. 생활안정자금대출 : 2,000만원 이하
  - 나. 주택관련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포함) : 5,000만원 이하
  - 다. 사고금정리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주택관련자금대출 포함) : 6,000만원 이하

□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8장 제1절 제5조(부당대출시 제재) ① 직원대출은 직원들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복지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자금용도 이외의 목적, 영업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제2조(발급절차) ① 예금잔액증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자서한 『예금잔액증명 발급 의뢰서』를 받고 본인 확인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되 신청자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함  
5.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제1편 제2장 제7절 제1조(임·직원의 금지사항) ① 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6. 불건전한 범위내대출 등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사금융행위, 조세탈루, 재무제표분식, 부당 내부거래,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7.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1명)	개선(改選)
직원 (2명)	정직3월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5.3.30.~2018.7.2. 기간 중 ○○○ 등 8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04건, 170억 1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96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31.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5억원)를 최고 22억 19백만원(총자산의 3.9%)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84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나. 주의사항

(1)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  
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9.11.27, 2018.7.24. △△△△△ 등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2건, 5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4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 (2)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12.1.26.~2017.2.3.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 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13건(3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4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4	02-3145-8785